

“오픈AI, 구글, 메타, 그리고 수많은 스타트업들은 미국이 패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며,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물론 규제는 있겠지만 상식적이고 현명한 규제일 때, 그때는 그 누구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중략)

지금 우리는 세상을 황금기로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한다면, 그 황금시대는 미국 근로자들이 건설하고, 미국 에너지로 움직이며, 미국 기술로 작동하고, 미국 인공지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지금보다 더 부유하고, 더 강하고, 더 위대하고, 더 자유롭고, 더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²⁾

1-2 미국 AI 정책 변화와 'AI 실행계획'의 위치

- **(미국 AI 정책 변화)** 오바마 행정부 이후 약 10년간의 미국 AI 정책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각 행정부는 상이한 정책 접근 방식과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AI 패권 경쟁에 대응
 - 「국가 AI R&D 전략계획」 수립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행정부는 AI 산업에 대한 민간 주도의 자율적 발전을 중시하며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마련에는 소극적인 접근 유지
 - 이와 비교하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AI 실행계획」을 통해 정부가 직접 AI 산업 발전 방향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AI 정책에 대한 국가 개입 본격화
 - 이하에서는 행정부별 AI 정책 변화 과정 분석을 통해 「AI 실행계획」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이에 영향을 미친 정책적·정치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
- **(오바마 2기 행정부 : '13~'16)** 오바마 행정부는 AI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고조되던 '16년, 집권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AI 기술 혁신 및 AI 기반 미래 사회에 대한 정책 방향 최초 제시
 - '16년 과학기술정책실 주도로 AI 워크숍 및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10월 「AI의 미래를 위한 준비」* 및 「국가 AI R&D 전략계획」** 발표
 - * Preparing for the Future of AI : 공익을 위한 AI 활용, 연방정부 AI 활용, 규제혁신, AI 인재 양성, 고용 시장 영향 파악, 안전-거버넌스 설계 등 AI의 사회적 영향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 제시
 - ** National AI R&D Strategic Plan : 장기적 투자, 인간-AI 협업, 법적·사회적·윤리적 대응, 안전·보안, 데이터셋 구축, 측정·표준, 연구개발 인력 등 7개 전략을 다루며 이후 두 차례('19년, '23년) 업데이트된 전략 발표
 - '16년 12월에는 「AI, 자동화, 경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AI 및 자동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충격과 경제적 과제를 진단하고 대응을 위한 정책 권고
 - * 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the Economy
 - 집권 말기라는 시기적 한계로 실질적 정책 이행은 제한적이었으나, AI의 국가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 혁신과 사회적 대응이라는 양면적 과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최초 제시한 점에서 의의
- **(트럼프 1기 행정부 : '17~'20)** 트럼프 행정부는 AI를 안보 및 경제 전략의 핵심 기술로 규정하고 법 제정과 행정명령을 통해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임기 내 정책 이행까지는 이르지 못함

- '19년 행정명령 제13859호 「미국의 AI 리더십 유지」*를 발표하고, AI 연구개발 투자 확대, 연방 데이터·컴퓨팅 자원 개방, 기술 표준 정립,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5대 중점 방향 설정
 - * 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 임기 말인 '20년에는 비국방 분야 최초로 국가 AI 전략을 법제화한 「국가AI이니셔티브법」*을 제정하고, AI 연구개발, 협업, 인력 양성, 표준 및 정책 조율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제도 기반 구축
 - *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 Act of 2020
- 법 제정으로 국가AI이니셔티브실, 국가AI자문위원회, 국가AI연구소·연구자원 등 주요 조직 및 인프라의 제도 기반을 마련했으나, 집권 초 AI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결정적 시기에 공백을 남김
- **(바이든 행정부 : '21~'24)**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의 AI 경쟁력 확보 기초를 계승하되 AI 안전성과 윤리적 개발을 정책 전면에 배치하여 책임감 있는 AI 리더십 표방
 - '22년 「반도체 및 과학법」 제정을 통해 핵심 기술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연방 투자 프로그램을 출범시키고,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대응을 위한 산업 기반 마련
 - * CHIPS and Science Act : 반도체 제조 및 연구 촉진, AI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내 공급망 강화와 연방 투자 확대를 위한 포괄적 산업 육성법
 - 과학기술정책실은 '22년 10월 「AI 권리장전 청사진」을 통해 안전성, 차별 방지, 프라이버시 보호, 고지 및 설명, 인간 개입 보장 등 5대 원칙을 제시하며 민간 영역의 책임 있는 AI 개발 촉구
 - * Blueprint for an AI Bill of Rights
 - '23년 생성형 AI 부상에 따른 주요 AI 기업과의 자율 안전 협약 체결 및 10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개발·사용」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 차원의 포괄적 AI 감독체계 구축
 - 바이든 행정부는 기술 주도권을 유지하면서도 규범, 안전, 포용을 강화하는 이중 전략을 통해 AI 정책을 제도화하고 국제적 책임을 확대한 시기로 평가됨
- **(트럼프 2기 행정부와 「AI 실행계획」)** 앞선 행정부들이 민간 주도의 자율적 발전을 중시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테크기업 로비, 중국과의 패권 경쟁, 에너지 산업 연계, 이념적 편향 비판 등에 대응하여 AI를 핵심 국정 과제로 격상하고 「AI 실행계획」을 수립
 - 오픈AI, 구글, 메타 등 주요 테크 기업들이 AI 혁신 가속화와 규제 완화를 위한 적극적 로비 활동을 전개하면서 정부의 AI 정책 방향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
 - 중국의 AI 기술 발전과 국가 주도 AI 전략이 미국의 기술 패권에 위협이 되면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응 전략 수립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두
 - 전력 집약적인 AI 산업 확산은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석유·가스 산업을 AI 인프라의 기반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정책 흐름으로 이어짐
 - 기존 AI 시스템들이 진보적 편향을 보인다는 보수 진영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AI를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가치 체계와 이념 간 경쟁의 상징으로 재정의하는 정치적 동력 형성
 - 이러한 배경 하에 「AI 실행계획」은 기술 주권, 산업 인프라, 글로벌 표준, 이념 경쟁 등 복합적 과제를 동시에 겨냥하며, 연방정부가 방향성을 설계하고 국가 전략으로 진화

2. 「AI 실행계획」 개요

2-1 계획 수립 추진 경과

- (**25년 1월**) 행정명령 제14179호 「AI 분야에서의 미국 리더십에 대한 장벽 제거」*(1.23 서명)를 통해 「AI 실행계획」 수립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AI 정책 방향에 대한 청사진 마련에 착수
 - 이 계획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번영, 경제적 경쟁력 강화, 국가안보 증진을 통해 미국의 글로벌 AI 패권을 지속·강화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
- (**25년 2월**)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공개 정보 요청(RFI)을 통해 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우선 정책 과제 관련 의견 수집
 - 민간 기업(291개), 협회(195개), 학계(82개), 비영리 단체(194개) 등 단체와 개인들로부터 총 10,067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높은 사회적 관심 확인

[조직별 주요 요구사항 요약]

민간 기업 10대 요구사항	협회 10대 요구사항
1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	1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
2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제도 정비	2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제도 정비
3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저력 공급	3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저력 공급
4 연방정부 AI 도입 가속화	4 의료 분야 AI 적용 및 안전성 확보
5 오픈소스 AI 생태계 지원	5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 제고
6 AI 인력 양성 및 교육	6 AI 인력 개발 및 교육
7 사이버보안 및 AI 보안	7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보장
8 AI 기술 수출통제 및 국가안보	8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AI 활용 지원
9 데이터 접근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	9 국제 협력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10 중소기업 지원	10 AI 기초연구 및 인프라 투자 확대
학계 10대 요구사항	비영리 단체 10대 요구사항
1 AI 교육 및 인력 양성	1 AI 안전성 및 위험관리
2 연구 인프라 및 컴퓨팅 지원	2 AI 거버넌스 및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
3 산업계-학계-연구계 협력 강화	3 AI 윤리 및 인권 보호
4 AI 기초연구 지원 확대	4 오픈소스 AI 지원
5 오픈소스 AI 지원	5 아동 보호 및 안전 확보
6 AI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6 AI 교육 제공 및 리터러시 증진
7 학제간 AI 연구 촉진	7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보장
8 데이터 접근성 개선 및 표준화	8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제도 정비
9 윤리적 AI 개발	9 사회적 형평성 및 포용성 확보
10 분야별 특화 AI 솔루션 개발	10 국제 협력 및 표준화 주도

※ 10대 요구사항은 각 단체 의견서에서 발췌한 의견 모음을 챗GPT 및 클로드로 교차 검증하여 도출

※ 민간 기업, 협회, 학계, 비영리 단체에서 제출한 주요 의견은 25페이지 [부록1]에서 확인